

감리업체에 대리점 맡긴 '산청'... 납품강요·과다설계 길 터줬나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22 제6면

'한방' 신규계약회사 5곳 포함
소방업계 "지위로 불공정 행위"
한방측 "법인분리... 사실 무근"
국회 '갑질차단' 개정안 발의중

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납 독점업체(7월 19일자 1면 보도)가 소방설비 설계·감리업체에 자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민간시장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안전장비업체 (주)한컴산청(한컴라이프케어)은 지난해 (주)한방과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 납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한글과컴퓨터가 산청을 인수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 업체와 신규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이중 한방이 산청의 신규 대리점으로 들어가면서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한방을 통해 납품을 받으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게 소방설비업체들의 중론이다.

한방은 2011년 7월 소방설비 기획 및 감리용역업체인 한방유비스(주)로부터 분리된 법인으로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용역 등을 주로 한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설비업체 관계자는 "소방설계 감리업체 관계사가 소방용품 유통 대리점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소방설비 설계를 법적 기준보다 높게 해 인명구조기구 등을 현장에서 납품을 받도록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방유비스가 지하 5층 지상 101층(연면적 66만1천134㎡)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용역을 맡아 진행하면서 한방을 통해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를 납품받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방유비스 관계자는 "법인이 분리된 뒤 한방유비스는 소방설계, 감리업무를 했고 한방은 시설 점검 유지보수 용역으로 영역 분담을 했다"며 "설계 감리 지위를 이용해 과다 설계를 하고 납품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소방설비업체와 여타 대리점들이 감리업체가 납품까지 도맡는 실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산청에 수차례 피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에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감리업체가 자회

2021. 1. 28.

경인일보 : 감리업체에 대리점 맡긴 '산청'... 납품강요·과다설계 길 터줬나

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지 못하게 하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조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과정에만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감리업체 관계사에 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